

» 양계 사육수수 감축과 앞으로 남은 과제

공동의 목표로 산업발전 이루어 지길...



김수형
축산신문 양계전문 기자

양계업계의 불황이 깊어지고 있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4분기 기준 국내 육계는 1,571농가에서 76,129,531수가 사육되고 있으며 산란계는 1,295농가에서 61,344,004수가 사육되고 있다. 이 중에서 5만수 이상의 농가에서 사육하는 닭은 산란계가 전체의 69.3%, 육계가 62.4%를 차지하고 있어 농장의 대형화가 시장의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소비의 확대가 이뤄지지 않은 채 진행된 대형화는 농가 스스로를 어렵게 만들었고 농가들 사이에서는 공급량 조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결국 정부에서는 의무 감축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고 관련 기관들은 불황 탈출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에 이르렀다.

1. 육계=종계, 원종계 감축사업 돌입

정부는 올해 1월부터 공급량 감축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월 21일 올해 병아리 생산잠재력 및 육계 사육 마리수의 증가로 닭고기 공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에 따라 안정적인 수급조절을 위해 육용(원)종계를 적정 수준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한양계협회와 한국계육협회가 시행을 맡으며 도계를 위한 재원은 닭고기자조금에서 마련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이다. 관련 단체들도 분주하게 움직였다. 시행령, 시행규칙을 만들기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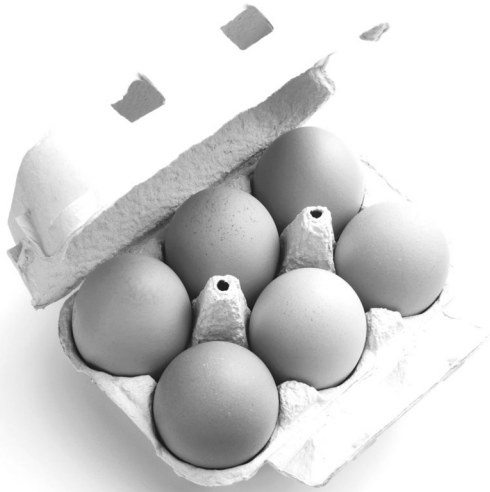
릴레이 회의를 거듭했고 결국 지난 6일 닭고기 자조금대의원회를 통해 <2012년 12월 31일 기준 35~45주령의 종계 100만수를 2차에 걸쳐 도태한다>는 내용의 종계 감축안이 최종 승인되면서 본격적인 도계가 시작됐다.

원종계 업체들도 업계의 노력에 동참했다. 삼화원종, 한국원종, 하림, 청정원종 4개 업체들은 지난달 원종계 감축안과 내년도 수입 계획에 대해 합의했다. 합의된 내용은 2012년 하반기부터 2013년 2월 입추 계군 9만3천500수(D라인) 중 1만3천500수를 도태하며 올해 수입은 2011년 실적 23만6천600수에서 31.95% 감축한 16만1천수로 제한하기로 했다. 업계는 모두 힘을 합쳐 불황을 탈출하고자 감축이 유동적으로 이뤄지는 것에 대해 일단 긍정적인 효과라고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풀어야 할 숙제도 남겼다. 대한양계협회 이준동 회장은 정기총회 자리에서 “종계를 감축한다고 하니 환우하는 농가가 나타

나기 시작했다”며 “산업 전체의 모습을 보고 함께 나아가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감축사업에 참여하기로 한 계열화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고 있는 농가들의 도계 작업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도 시급한 상황이다.

2. 산란계=단위면적당 사육수수 변경

산란계 역시 공급 과잉에 몸살을 앓았다. 육계와 달리 수입에 의한 피해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산란계는 농가들의 과당경쟁이 불황을 야기시켰고 이는 D/C(산지 할인거래)폭이 상승, 이것이 생산자에 의한 것이냐 유통상인에 의한 것이냐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생산자들은 요즘처럼 물량이 많은 시점에서 상인들이 D/C폭을 늘린 후 시세 차이를 통한 차익을 남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상인들



은 오히려 계란 보관 장소가 여유롭지 못한 농가들이 덤핑 판매를 통해 할인폭(D/C)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생산자와 상인들의 갈등이 증폭되면서도 근본적인 문제인 공급 과잉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자 농가에서 먼저 움직였다. 농가들은 지난 1월 대한양계협회 채란분과위원회에서 대규모 사육 농가부터 점차 모든 농가가 사육수수 10%씩 감축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지난달 23일 변경된 축산법의 시행에 따라 산란계의 단위면적당 사육수수도 0.042㎡/수에서 0.05㎡/수로 바뀌어 감축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 셈이다. 대한양계협회에서도 <20만수 이상 농가에서 우선적으로 감축에 동참해달라>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는 등 감축사업을 독려했지만 아직까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대규모 농가들은 “대규모 농가들만 우선 감축 보다는 모두가 같은 조건을 가지고 함께 감축하는 것이 혼란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안영기 대한양계협회 채란분과위원장은 “대규모 농가들이 현재 산란계 산업

을 이끌어가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한 책임을 다해달라는 것”이라며 “모든 농가가 감축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만큼 오해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3. 남은 과제 = 농가의 단합이 중요

시설이 현대화 되고 생산성 향상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공급량의 증가 문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소비의 확대가 뒷받침 되지 않은 채 진행된 이러한 연구는 결국 양날의 검으로 작용했다. 그 동안 농가들은 불황 탈출을 위해 정부의 개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정부의 입장은 계속 “농가의 단합이 우선”이었다. 농가들이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선부른 개입은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에서 의무 감축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이마저도 각자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농가들의 100% 공감을 이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물론 지금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긴 불황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량의 축소는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사항임에는 분명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요에 맞는 계획적인 생산과 더불어 양계산물의 소비를 확대시킬 수 있는 홍보 및 제품개발도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요즘같이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는 하나 되어 위기를 극복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정부를 상대로 목소리를 낼 때도 힘을 실을 수 있다. ‘나 하나 썸이야’라는 생각보다는 농가와 계열사 모두 불황탈출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이번 감축사업에 동참해 밝은 미래가 빠른 시일 내에 찾아오길 기대한다. **양계**